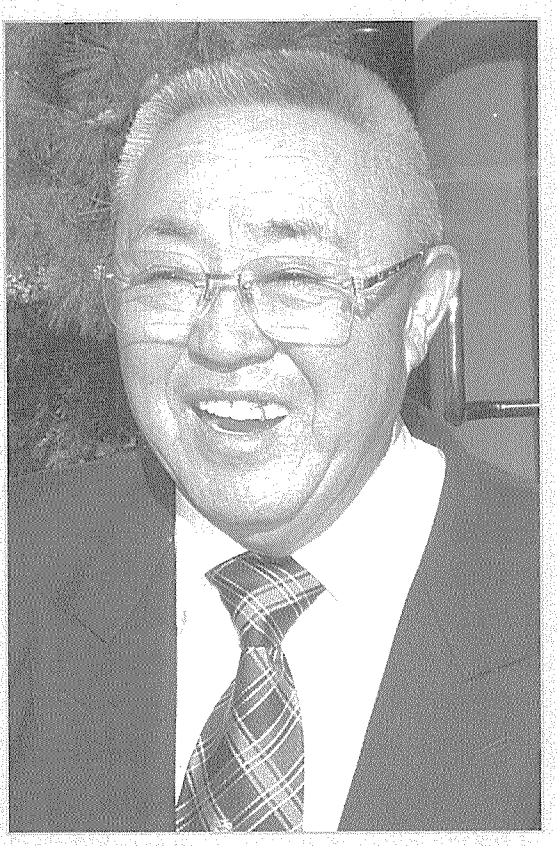
시마다 마사다케(嶋田匡武) 세이메이농장 대표

한국의 보상체계 일본이 배워야…



본고는 지난 14일 본회 사무실에서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마다 마사다케(嶋田匡武)(세이메이농장 대표)씨를 만나 일본의 양계산업 현황과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과 관련된 일본의 대처방안을 들어보았다. 시마다 씨는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縣)에서 30여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GP센터, 자가배합사료공장, 계분비료공장까지 갖추면서 농장관리를 해오고 있다. 세이메이 농장은 한국의 양계인들에게 계사 현황은 물론 난가공, 유통현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견학코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시마다 씨도 한국을 여러번 방문하면서 한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본인이다. 지난 2003년에는 보일공업에서 생산한 국내 케이지를 농장에 설치하면서 국내 양계기자재 산업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방문목적은?

현재 일본의 양계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병원성이긴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H5N2)가 이바라기현과 사이타마 현을 중심으로 발병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의 이동철을 맞이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상륙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대부분의 농장이 질병이 확산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일본의 보상체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 농가들이 정부정책에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HPAI가 한국에 발병된 이후 조기에 퇴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체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접하고 이를 배워 일본 정책에 반영시키고 생산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일본은 지난 6월 26일 이바라기현(茨城縣)의 한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2)가 처음 발견된 이후 사이타마현과 이바라기현의 32개 농장에서 발병하고 있으며, H5N2형으로 나타난 농장은 무창계사 일부를 제외하고 150만수의 닭들이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월말 마지막으로 발생된 농장은 이바라기현의 북부지역으로 닭 이동금지 구역안에 위치했던 농장인데 8만2천수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바라기현은 일본내 1억3천수중 1천만수의 닭이 사육될 정도로 일본에서 산란계가 가장 많이 사육되는 곳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본의 양계산물의 소비가 감소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언론보도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방송되기 전에 사실여부를 심의한 후 방송을 내보내는 등 방송자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방송이 앞장서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자세는 거의 없고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만 방송을 해줄 정도입니다.

일본의 백신정책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유전자형이 남미의 멕시코나 과테말라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곳으로부터 백신을 밀수해 접종했을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면서 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생산자들은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디바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살처분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올때까지는 백신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했을 경우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과밀 사육지역에서는 살처분 정책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이 양계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디바정책은 살처분과 백신을 병행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가금티푸스 백신에 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란계 농장에서 가금티푸스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백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백신정책이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보상체계에 대한 견해는?

현재 일본은 저병원성이더라도 고병원성 변이가 가능한 혈청형에 대해서 살처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창계사의 경우 같은 농장이더라도 균이 배출되지 않은 동은 살처분을 시키지 않고 있는 반면 모든 개방계사는 살처분을 시키고 있어 개방계사를 경영하는 농장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서는 각 현마다 보상기준을 세워 운영하고 있지만 일괄성이 없으며, 질병에 걸린 농장은 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발생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고, 100%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차후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대해 배울점이 많습니다. AI방역은 물론 보상문제까지 양국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갈 때 양계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